비전 없는 지도자는 비겁해진다

태평로
김태훈
논설위원

19세기 말 조선은 무능하고 가난했다. 조선 멸망의 첫 번째 문을 연 사건이라는 임오군란도 군인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린 게 화근이었다. 군란이 터지기 두 달 전, 고종과 대관들이 텅 빈 국고를 걱정하는 회의를 열었다. 고종이 걱정하자 의정부 고관들이 "계책은 오직 절약하는 것뿐"이라며 근검절약을 대책으로 내놨다. 절약은 개인에겐 훌륭한 삶의 태도이겠으나 그것만으로 국가가 번영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종과 신하들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에겐 목숨 걸고 추진해야 할 조선의 미래, 즉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함재봉 한국학술연구원장은 저서 '한국 사람 만들기'에 이 일화를 소개하며 '조선의 지도층이 농본사회를 이상으로 삼는 성리학적 왕도정치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같은 위기를 겪어도 비전이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한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엔 '사무라이 칼에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며 근대적 국민국가 건설을 꿈꾼 사쓰마 번(藩) 지도자들의 비전이 있었다. 임오군란 20년 전인 1862년, 사쓰마와 영국 해군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사쓰마는 영국 해군의 함포 사격에 불바다가 됐고 패전으로 배상금까지 물어야 했다. 사쓰마의 리더들은 위기를 내핍으로 벗어날 생각이 없었다. 영국의 막강한 힘을 목격한 그들은 더 큰 그림을 그렸다. '영국처럼 부강한 나라'라는 비전이 생겼다. 자기를 굴복시킨 이들의 군함을 사고 "유학생을 보낼 테니 가르쳐 달라"고도 했다.

여야 정치인들, 산타가 됐나
인기 연연해 퍼주기에만 골몰
정작 미래 위한 대비는 외면해
훗날 '비전 실종 시대'라 할지도

비전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위대함을 품게 한다. 몇 해 뒤 메이지유신에 성공하며 국가 권력을 손에 넣은 사쓰마의 리더들은 특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유신 동지들에게도 보상을 바라지 말라고 했다. 사무라이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칼 휴대를 금지했고 경제적 기반이었던 영지까지 내놓게 했다.

우리에게도 큰 비전을 품은 지도자가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된 나라에서 떵떵거릴 줄 알았던 지주들에게 땅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의 농지개혁 덕에 땅을 갖게 된 농민들이 6·25 때 대한민국 편에 섰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한번 잘살아보자"는 비전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 손에 선물을 쥐여 주지는 않았다. 인기만 구하려 했다면 그랬겠지만 그가 원한 건 인기가 아니었다. 그랬기에 "우리가 지금 고생해서 훗날 자식들 잘살게 하자"며 피와 땀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이 땅의 정치인들은 선물 못 줘 안달 난 산타가 됐다. 여든 야든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국민 손에 25만원씩 쥐여주자 하고, 남는 쌀을 무조건 수매해 주자고도 한다. 선심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한 비전으로 삼을 수는 없다. 양곡법만 해도 쌀을 무조건 사주는 것은 농민을 돕는 게 아니라 농업 구조조정을 훼방하고 차세대 농업을 준비해 온 이들의 의욕을 꺾을 우려가 크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다. 매사 느려 터졌다는 일본조차 TSMC 구마모토 공장을 착공 2년도 안 돼 완공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선 반도체 공장 지으려면 토지 보상부터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데만 몇 해가 걸린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한 AI 시대에 송전선 하나 놓기가 힘겹다.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에 앞장서야 하지만 감히 국민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한다. 우리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훗날 우리 자손들이 잠깐 잘살다가 별 볼일 없어진 이 나라 역사를 배우며 지금을 비전 실종 시대였다고 하지 않겠는가.

김준의 맛과 섬 [190]

고흥 가리맛조갯국

1일과 6일이 동강장이다. 인근 벌교장이나 과역장이 더 크지만, 동강장이 연휴와 시간이 잘 맞았다. 어디나 오일장은 아침 장이다. 특히 농번기철에는 장꾼이나 주민들이 일찍 장을 보고 점심 무렵이면 파장 분위기다. 오이, 고추, 가지 모종까지 몇 개 사서 나오다 어물전에서 가리맛조개를 발견했다. 오뉴월에 가리맛조개 맛을 아는 사람은 지나칠 수 없다. 게다가 여자만 펄밭에서 뽑아온 것들이라니. 가리맛조개는 캐는 것이 아니다. 호미도 삽도 무용지물이다. 펄배를 타고 들어가 조개 구멍에 얼굴이 닿을 정도로 팔과 어깨를 집어넣어 뽑는다. 산란을 앞둔 지금이 맛이 좋다. 조개는 물이 들어오면 표층으로 입수관을 내밀어 부유물을 여과해 섭취하고 출수관으로 물을 뱉어낸다. 이 과정을 통해 여자만 바닷물을 정화시키는 일을 한다. 참꼬막은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가리맛조개는 여자만에서 그나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어민들은 가리맛조개를 뽑으러 갈 때는 간단한 끼니를 준비한다. 조개를 뽑다 말고 점심을 먹겠다고 펄밭에서 나올 수 없다. 그렇다고 밥과 찬을 갖추고 밥을 먹을 수 없다. 미숫가루를 탄 물을 얼리거나, 떡이나 빵이면 충분하다. 비닐봉지에 꼭 싼 끼니를 펄배 위에 올려두고 간단하게 해결한다. 물도 맘껏 먹을 수 없다. 바다가 허락한 시간에 맞춰 인간의 시간을 거스르며 일을 한다. 많이 뽑을 때는 몸무게보다 2·3배 무거운 가리맛조개를 펄배에 싣고 나온다. 물 빠진 갯골을 따라 무거운 펄배를 밀며 나오면 입에서 단내가 난다. 세척장에서 가리맛조개를 깨끗하게 씻고 크기별로 나누어서 상인에게 넘겨야 끝난다.

가리맛조개는 찜, 구이, 국, 회무침에 잘 어울린다. 다만 조개류가 그렇듯이 하루 정도 해감을 해야 한다. 동강장에서 구입한 가리맛조개를 찜기에 올려 살짝 익혔다. 조가비가 입을 열자, 불을 끄고 꺼내 살을 발라냈다. 조갯살만 아니라 국물을 이용하기 위해 찜기를 사용했다. 찜기 밑으로 빠진 육수에 부추와 마늘을 다져 넣은 후 살짝 끓였다. 가리맛조갯국이다. 조갯살은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육즙은 재첩보다 담백하고 맛이 깊다. 백합이 조개의 귀족이라면, 가리맛조개는 조개 맛의 황제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說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예상된 반응이다. 유엔 규정상 명백한 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중국 공산당의 반문명적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그럼에도 강제 북송 중단 요구는 계속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한중 외교 장관 회담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었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가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기습 북송이었다. 중국 정부의 야만성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무기력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용한 외교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중국이 야만 행태를 노골화하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또다시 탈북자들을 기습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00~200명이라고 한다. 작년 10월 대규모 북송을 두고 쏟아진 국제적 비판을 의식해 잠정 보류했던 강제 북송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다. 탈북자들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도 탈북자들이 계속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우리는 중국의 야만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중국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정권이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다.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했으면 한다. 이달 하순 서울에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과거 이 회의에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국민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 교체에 대해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원칙대로 수사할 것" "검사들을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수뇌부 교체 인사를) 사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는 7초 정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갈등설 등 인사 관련 추가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검찰 인사는 법무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다. 전날 검사장급 39명의 교체가 발표될 때 이 총장은 지방 순회 중이었다. 자신의 참모진이 대거 바뀌는데도 대검을 비운 것은 불만의 표현일 수 있다.

이번 인사를 보고 4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시 정권은 추미애 법무 장관을 내세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조국 일가 불법, 유재수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던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들을 전부 좌천시켰다. 윤 총장 의견은 묵살했다. 빈자리는 예외 없이 친문 검사들로 채웠다. 서울중앙지검장엔 문 전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앉혔다. 윤 총장의 손발을 잘라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이었다.

문 정권은 수사 지휘부를 좌천시킨 데 이어 수사팀 중간 간부들도 쫓아내는 '2차 인사 학살'을 했다. 울산시장 선거 공작 등 대통령과 정권 실세 관련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동부지검 차장검사 5명을 모두 지방으로 발령 내 수사에서 손 떼게 했다. 담당 부장검사까지 쫓아내며 수사팀을 공중 분해했다. 그런데도 윤 총장이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수사 등을 계속하자 '윤석열 찍어내기'를 했다.

국민은 불법을 덮으려고 수사팀을 공중 분해한 문 정권 행태에 분노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 총장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결과로 윤 검찰총장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 라인을 교체한다고 비위 의혹이 덮이지 않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다. 자신이 당한 일을 자신이 되풀이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뉴스 댓글에는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다. 뼈아픈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영상 사설

'희망 고문'으로 끝난 사전청약, 정책 실패는 국민의 고통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졸속으로 도입했던 공공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제도가 2년 10개월 만에 폐지된다. 사전 청약은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서 수요자에게 주택을 미리 분양하는 제도로, 집값이 급등하던 2021년 7월 문 정부가 도입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 매수세를 묶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택지 조성,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 청약을 받다 보니 토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문화재, 보호 동식물 군집 등이 발견되면 본 청약이 한없이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사전 청약 당시엔 1~2년 뒤 본 청약을 하겠다고 했지만, 본 청약이 3년 이상 지연되는 단지가 속출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에게 '희망 고문'이 돼 왔다. 사전 청약 물량 99단지 5만2000가구 중 제때 본 청약이 이뤄진 곳은 단 한 곳(825가구)에 불과하고, 늦더라도 본 청약이 완료된 곳은 13단지, 6915가구에 그치고 있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전세 대출 추가 이자 부담을 안고, 본 청약 시 사전 청약 때보다 15% 이상 급등한 분양가를 떠안아야 하는 등 각종 피해를 보고 있다. 대폭 오른 분양가를 감당 못 해 본 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치는 등 속속 결함이 드러났다. 제도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다. 사전 청약 제도 실패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게 된다는 또 하나의 사례다.

폐지해도 문제다. 사전 청약 제도 폐지가 집값 불안 심리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현재 주택 시장은 고금리에다 건설 원자재 값 급등으로 아파트 신축 인허가 건수가 급감해 신축 아파트 공급 불안 심리를 낳고 있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서고, 전셋값은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서 속도를 더 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전 청약 제도라는 정책 실패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긴 민주당이 재개발·재건축 유인책을 '특혜'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금은 낡은 논리로 무작정 반대만 할 상황이 아니다.

한국판 문화대혁명 홍위병 노릇, 누가 했나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대법) …

촛불 광란 때 길길이 날뛴 언론들, 뭐라 말 좀 해보라

[우병우 악마화]에 광분한 언론들 … 왜 그랬을까?

특히 심했던 어느 비(非) 좌파언론, 다른 흑심(黑心) 있어 그랬나?

[최서원 태블릿 PC] 포렌식 결과 공개되면, 판 뒤집히는 건 아닐까?

이제 우병우가 당시 [언론 광란]에 입 열 때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 등 두 개의 재판으로 진행했고, 각각 징역 2년 6월, 1년 6월을 선고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진보교육감 사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기타 인사들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한겨레〉 2024/05/09

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관한 언론 보도다. 주목되는 것은 [국정농단 방조]가 무죄로 끝났다는 부분이다.

[우병우 악마화]에 광분한 언론들

그러나 6년 전 1심 판결은 그의 [국정농단 방조] 피고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언론의 논조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마치 악당을 준엄하게 응징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KBS는 이렇게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로 지목됐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관실 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으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의 직권남용, 국정농단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비단 KBS뿐 아니었다. 도하 모든 언론 매체들이 객관적 사실 보도 이상의, 주관적 감정을 섞은 [우병우 악마화]에 발 벗었다. 논설들은 더했다.

생사람 잡은 언론들, 왜 조용하나?

그러나 그런 1심 판결의 [국정농단 방조] 유죄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는데도, 오늘의 언론 당사자들은 쓰다 달다, 말 한마디 없다. 그야말로 담담한 [객관적 사실 보도] 몇 줄 정도?

아예 입 닫고 시치미 뚝 떼는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그 당시 보도와 논평이 잘못됐다"란 자책이라곤 더더군다나 없다. 이래도 되나?

이런 [생사람 잡는] 식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필자 개인도 1958년 12월 그런 봉변을 당했다. "교내에서 적기가를 불렀다"는 기사들. 요즘은 [진보]라는 매체가 대문짝만하게 실었다. 붙잡혀갔더니 수사관은 그 대목에 관해선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매체는 여태 정정 보도 한번 하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정변], 언론 홍위병의 불장난으로 점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도 실은 언론이 앞장서 일으킨 소동이었다. 이른바 [최서원 태블릿 PC] 운운만 해도 그렇다. 지금 와서 보면 참으로 허무맹랑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엔 서슬이 푸르렀었다. 그 포렌식 결과가 공개되면, 혹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를 노릇? 자못 궁금하다.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은, 이른바 [박근혜 탄핵] 사태 전체상의 극히 조그만 일부일 것이다. 이 부분이 뒤집힌 [역사적]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그때의 [한국판 문화혁명], 특히 당시의 [언론 홍위병] 역할에 대한 본격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

겨우, 귀퉁이에 찬물 끼얹은 셈이지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水能載舟 亦能覆舟, 《정관정요》). 민심의 풍랑이 청와대를 덮쳤다. 지난 9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그전 주말인 3일 촛불집회에서 200만을 훌쩍 넘는 국민이 "하야하라"란 외침을 보낸 덕분이다. 민심에 불을 댕긴 건 언론이다."

〈오마이뉴스〉 2016/12/12

[우병우 국정농단 방조 무죄 확정]은, 이 불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한 귀퉁이에나마 찬물을 끼얹은 셈?

◀ 2018년 12월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는 우병우 전 수석.

그는 무려 384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2심에서 검찰은 그에게 무려 징역 13년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촛불광란이 한국판 문화대혁명이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 연합뉴스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newdaily.co.kr 뉴데일리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4년 5월 10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89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컨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